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중소기업·소상공인 핵심 경영애로 해소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발표 (‘25.11.21.)



「기행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 발표 (‘25.9.23.)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
(‘25.11.4.)

민생부담 완화 및 소비자권의 증진

✓ 국민생활 밀접 품목 및 산업 중간재
분야 담합 시정

* 이동통신, 스테인리스스틸, 아연도금철선 등

✓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
집중 처리

* 배달앱 주요 사건 조사 완료

✓ 새로운 분야 소비자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 그린워싱, 시워싱, 다크 패턴 등

✓ 민생밀접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
제도 개선

* 스프레 가격 표시제 도입, 식품 용량꿈수 근절방안 마련

반칙행위 제재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글로벌 빅테크의 반칙행위 시정

총수 2세 회사 지원,
부실 계열사 지원 행위 등 제재

미래 전략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총 22건 개선



경제상황

완만한 경기회복이
예상되나,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



경제구조

경제 주체 간
구조적 힘의 불균형
여전



국민기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위 역할**에
대한 기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핵심과제 1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핵심과제 2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핵심과제 3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핵심과제 4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

◆ 사건처리의 신속성·투명성 제고

◆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

01

핵심추진과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때 제값 받을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여건 조성

-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 → 하도급법 개정
- ✓ 납품대금-원가 연동제 확대: 에너지 비용까지



- ✓ 산업재해 안전비용 전가, SI 인프라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점검

가맹점 권익 강화 및 신유형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 ✓ 가맹점주 권익 강화 대책 →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



- ✓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고금리 대부업과 결합된 불공정행위 등 조사

유통분야 대금 안정성 강화 및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 ✓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단축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 ✓ 대형마트 등의 대금 지연지급, 상품대금 부당감액 등 감시 강화

갑을(甲乙) 분야 불공정행위 적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술탈취 근절

- ✓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채널 활용, 전문 조사인력 증원 → 직권조사 확대
- ✓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증거확보·입증부담 애로 해소 → 하도급법 개정
- ✓ 중소기업 기술자료·비밀보호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교육 강화

익명제보센터 강화

- ✓ 익명성이 보장되는 제보 시스템 운영
* 로그인 정보, IP 주소 미수집 등
- ✓ 제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유사사례 일괄 조사
- ✓ 익명제보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전문조사팀을 운용

甲乙 동반성장을 위해 乙의 협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의 단체행동 보장

중소기업·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자들의 정당한 몫 보장을 위해
對대기업 단체행동에 대해 담합 규정 등
적용제외 검토

노조 등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노동자·노무제공자
·노동조합 등을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 검토

가맹점주·하도급기업·대리점주 협상력 강화

가맹점주 사업자단체의 단체협상권 보장



대리점주·하도급기업 간 결속 강화를 위한 단체구성권 부여



02

핵심추진과제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겠습니다

가격담합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 ▶ 식품 등 민생밀접 4대 분야
담합 집중 점검




- ▶ 필요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적극 부과


불공정행위 제재의 실효성 제고

- ▶ 불공정거래 억제를 위한
경제적 제재 강화
- ▶ 조사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제조사권 도입 등 방안 검토
- ▶ 가격남용행위 규율을 위한
현행 법령 개정 추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  **식료품, 영화관, OTT 스트리밍 등**
✓ 시장구조 및 고물가 원인 심층 분석

- ▶  **농산물 유통, 주정**
✓ 독과점적 유통거래구조 폐해 완화 방안 마련
✓ 주정도매업자 중심 유통구조 개선

- ▶  **AI 활용 산업**
✓ AI 접목 시 혁신 잠재력이 큰 분야의
기술발전 및 시장진입 저해 규제 개선
* (예) 돌봄 로봇, 화재예방 원격시스템 등

불공정 피해구제 시스템의 외연을 확장시키겠습니다

피해구제 관련 민사소송 활성화

✓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 ✓ 단체소송 허가 절차 폐지
- ✓ 행위 금지 외에 소비자 피해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자료제출명령제 확대

- ✓ 법원의 사업자 및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 확대 도입

✓ 사인의 금지청구제 확대

- ✓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 확대 도입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활성화

✓ 분쟁조정 활성화

- ✓ (B2B)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 ✓ (B2C) 소액사건 단독조정절차 도입

✓ 소비자원 역할 강화

- ✓ 유사·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일괄 구제방안을 사업자에게 권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조성

✓ 불공정행위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

→ 소비자·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회복 도모

- ✓ 분쟁조정 지원
- ✓ 피해금액 융자제공
- ✓ 소송지원

신속한
피해보전

민생 밀집 분야의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청·장년층: 행사건강·AI 상품 등



문화, 음식점, 식당 등

공연·스포츠 티켓예매, 음식점 불공정약관 점검,
식당테크 불공정 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정



운동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AI 상품

유료 AI 서비스의 해지를 방해하는 다크패턴,
AI 탑재 제품 부당 표시·광고 점검

노년층: 상조, 장례 분야

상조

선수금 운용규제 강화, 사업자 책임경영 유도,
공제조합 감독 강화 등 할부거래법 전면 개편

장례

외부 음식 반입금지, 화환 임의 처분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약관 개정



03

핵심추진과제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디지털 분야 등의 **시장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디지털 시장 독점력 남용·불공정행위 감시

✓ 독점이 고착화된 디지털 시장

- ✓ 인접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 ✓ 거래상대방 불이익 제공 행위

✓ 배달앱·대리운전 플랫폼

- ✓ 최혜대우요구, 끼워팔기 등
- ✓ 대리기사 불합리한 부담 관행 점검

디지털 시장 입법논의 지원

✓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안전성·투명성 강화

✓ 입점업체 대금 보호, 계약서 교부, 입점업체 협상력 보강 등

신속·면밀한 기업결합 심사

✓ 빅테크·가상자산 플랫폼 등 혁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 M&A 심사

✓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 구조조정 M&A 신속·면밀하게 심사

✓ 항공분야 M&A 시정조치 등에 대한 엄정한 관리

디지털 소비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적극 대응

- ▼ AI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 ▼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가격표시 왜곡 관행 등 개선
- ▼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 관련 불공정 이용약관 점검

플랫폼 이용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

- ▼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책임 확대
- ▼ 음식 배달 등 플랫폼을 통한 인접거래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제 적용
- ▼ 허위·과장·기만 유인행위에 대해 원칙적 과징금 부과

04

핵심추진과제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대기업집단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누락행위 엄정 대응

- ✓ 부당내부거래
 - ✓ 총수일가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 일감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엄정 제재
 - ✓ 금융·민생밀접(식품, 의료) 분야 집중 감시
- ✓ 계열사 누락
 - ✓ 총수의 자금 조달,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위장 계열사를 활용하는 행위 엄정 조치

사익편취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 ✓ 사익편취
 - ✓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하도록 산정방식 등 개선
- ✓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 ✓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 강화

- ✓ 사익편취 규제회피 방지
 - ✓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 제외
- ✓ 지주회사 제도 보완
 - ✓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 축소
 - 신규 자·손자회사 상장 시 의무지분율 상향: 30% → 50%

첨단전략·벤처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례 관련 안전장치 마련

-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례*가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

* 증손회사 의무지분을 완화 및 금융리스업 허용

특례대상 반도체 산업

심사·승인 공정위 사전심사·승인 및 5년 주기 재심사

지역균형 지방 투자 조건

일반지주회사 CVC 관련 제도개선

- ✓ 펀드별 **외부출자** 비중 40%→50%,
총자산 중 **해외투자** 비중 20%→30% 상향
- ➔ **일반지주회사 CVC** 벤처투자 규모 확대 및
글로벌 유망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활성화



05

추진기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인력·조직 확충

본부

- ✓ 민생사건 조사인력(+75명)
- ✓ 경제·데이터 분석인력(+23명)
- ✓ 심의보좌 인력(+19명)

지방

- ✓ 경인사무소 신설(+50명)

▶ 인력 총원 이후 처리 기간 단축 목표
: 15개월 → 8개월 (약 40%)

집행권한 지방이양

과태료·시정권고 권한 중 일부 지방정부 이양

하도급

-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미공개
- 내국신용장 미개설
- 관세 환급액 미지급

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공시의무 위반 (미공시, 허위공시 등)

표시광고

- 결혼서비스업, 체육시설업
중요사항 표시·광고 의무 위반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접수

'민원처리 전담팀' 설치·운영
→ 1차적 민원 필터링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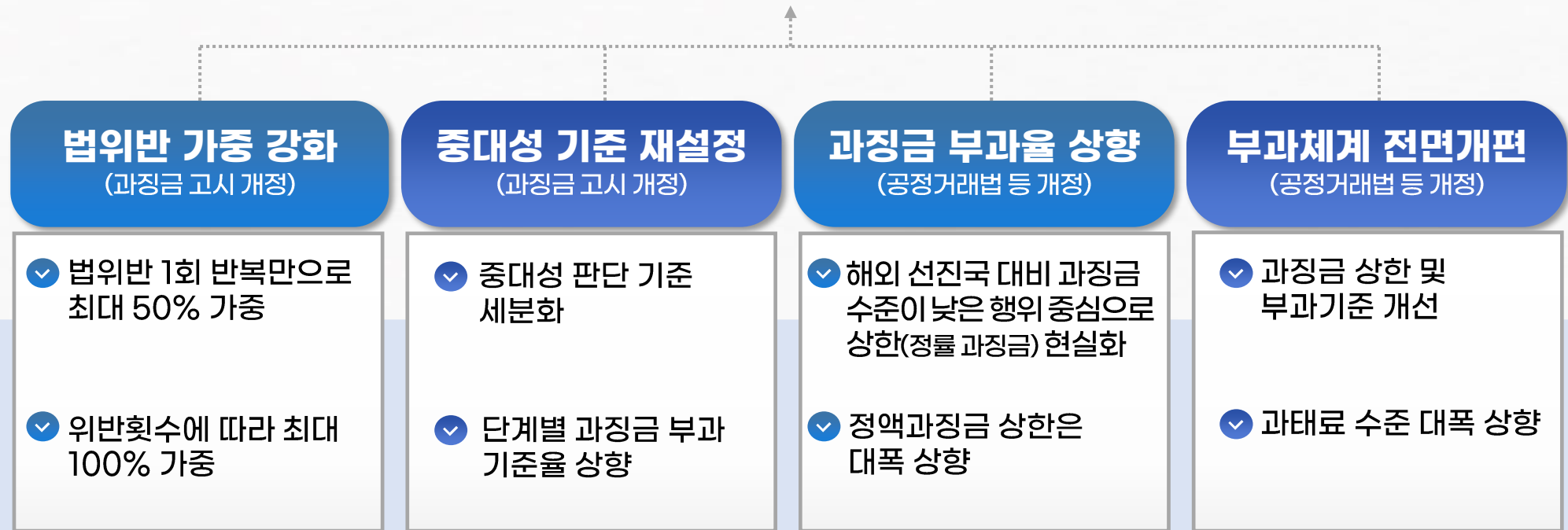
조사

'주요사건 신속처리팀' 운영 상시화
→ 주요 민생사건 집중 처리

심의

비상심의체제 가동(심의 횟수 확대)
→ 심의기간 단축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제조사권 도입 등 방안 검토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경제** 공정위가 합니다

